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-북미연구회-

작성부서 :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
작성일 : 2015. 12. 8
작성자 : 김종혁 전문연구원
전화 : 044-414-1193
연락처 : jhkim@kiep.go.kr

I. 개 요

1. 일시 : 2015. 12. 4(금) 14:00~17:00

2. 장소 : KIEP 서울회의실(비즈니스센터)

3. 발표자(1) : 고희채 박사(KOTRA)

4. 제 목

– 2016년 미국의 주요 이슈 및 전망

5. 참석자(총 7명)

– 내부참석자(5명): 권기수(미주팀, 연구위원)

윤여준(미주팀, 부연구위원)

김원기(미주팀, 부연구위원)

김종혁(미주팀, 전문연구원)

권혁주(미주팀, 연구원)

– 외부참석자(2명): 고희채 박사(KOTRA)

김형주 연구위원(LG경제연구원)

II. 주요 발표 내용

□ (미 대통령 및 상·하원 선거) 미국 대선의 주요 경제이슈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, 세제개혁, 최저임금 인상, 원유수출재개 등임.

- 미국 대통령 선거는 '16.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.

o 상원의 1/3과 하원 전체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

-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며, TPP에 대해서도 점차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음.

o 대선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주당지지 기반세력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.

- 공화당의 후보들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

o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현재 35%인 법인세를 15%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율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

o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현재 7단계인 세율을 15%와 35%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

o 잭 부시 후보는 현재 7개인 세율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를 20%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

□ (TPP 의회 비준 및 발효) TPP 협상 타결 1개월만인 11.5일 웹사이트를 통해 협정문을 공개하였으며, 협정문은 정식 서명 이전까지 법률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.

- TPP 협정 서명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무역촉진법(Trade

Priority Act)에 의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.5일 서명 의사를 담은 서한을 의회에 발송.

o 이르면 2016년 2월 3일 TPP 공식 협정문에 서명 가능

- USTR 대표는 11.5일 국제무역위원회(USITC)에 TPP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요청하였으며, 이에 따라 USITC는 TPP 공식 협정 서명 후 105일 이내에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

o 2016년 5월 중순경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임.

- 미국의 TPP 비준안 발의는 2016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, USITC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완료(서명 후 105일 이내)한 이후인 2016년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o Inside US Trade는 TPP 비준안 발의 시기가 미국 대통령 주요 경선이 끝나는 2016년 5~6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TPP는 참여국 가운데 최소 6개국(GDP의 85% 이상)이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발효.

o TPP 참여국 중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0.4%와 17.7%임(IMF, 2013년 기준).

□ **(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)**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는 시장이자율, 주식 및 채권시장, 외환시장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.

- 금, 달러, 엔화, 미국 국채의 4대 안전자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달러화 자산임.

o 달러화 강세는 다른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.

- 달러 강세는 캐나다, 스웨덴(에너지), 호주(철광석) 등 원자재가 주력 수출품인 국가들의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신흥국의 경우 자본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최근 원화의 약세 폭도 확대되고 있음.
 - o 한편 금리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멕시코,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.
- 국제유가의 경우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 연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, 과거 금리인상처럼 매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판단됨.
 - o 2004년 미 연준은 1.00%이던 기준금리를 4.25%까지 17회 연속으로 인상시킨 바 있음.
 - 2016년은 미국은 출구전략에 돌입한 반면, 일본, EU, 중국 등은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 - o 일본은 지난 9.15일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ECB는 양적완화 기간('15.3월~'16.9월) 연장을 고려
 - o 중국은 '14.11월 이후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5번, 3번 인하
- (제조업 리쇼어링 확대)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은 201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,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,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인식 확대 등이 주요 원인임.

- 2010년 생산성을 고려한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의 31%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44%까지 확대될 전망
-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'13.9월 이후 줄어들던 제조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- 2014년 4분기 미국의 제조업체 수는 34만개를 기록
-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ffshoring으로 3~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reshoring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남.
-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, 첨단 제조기술 확보,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
- 한국 정부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과 동시에 미국 R&D 진흥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자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.
- **(미국의 대 쿠바 정책 완화)** 지난 9월 발표한 2차 엠바고 완화 발표의 주요 내용에는 여행, 통신 및 인터넷, 상업 및 금융거래, 쿠바 내 주재 및 활동, 송금 등이 있음.
 - 미국 정부는 2014년 12월 1차 엠바고 완화조치를 발표하였으나, 통상과 여행 부분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.
 - 따라서 2차 발표에서는 제 3국 경유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,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.
 - 사전 승인된 활동에 대해 쿠바 내 사무실, 소매점, 창고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, 쿠바인을 고용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가족 송금, 기부성 송금의 경우 한도액을 철폐하였음.

III. 주요 토론 내용

- (미국 대선의 두 가지 특징) 2016년 미국 대선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우선 소득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며, 둘째 공화당 유권자들의 워싱턴 정치에 대해 실망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임.
 -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의 임금이 지난 10~15년간 정체해 있고, 상위 1%에 부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많은 미국인들이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음.
 -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는 경기 침체에 지친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익과 부가 최상위 1%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‘민주적 사회주의자’ 이미지를 굳히고 있음.
 - 힐러리 후보가 TPP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임.
 - 공화당 유권자들은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에 끌려 다닌 기존 공화당 정치인들에 크게 실망하고 있음.
 - 정치 명가 출신인 공화당 쥘 부시후보의 지지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직설적인 화법과 아웃사이더인 트럼프, 카슨 후보의 지지율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.
 - 공화당 후보들의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실제로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임.
- (다자간 무역자유화 확산 가능성 증가) TPP 타결은 점차 이질적이 산업 구조를 가진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
- TPP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o TPP는 한·미 FTA 이후 일본의 최우선 통상정책 과제였으며, 이를 통해 12개 나라가 거대한 글로벌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원산지 규정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음.
-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부재 문제로 비판을 받아오던 오바마 정부도 TPP 타결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었음.
- TPP는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산업 구도를 가진 국가들끼리도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.
 - o 이는 양자간 FTA가 300여 개에 달해 스파게티 보울(spaghetti bowl) 현상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.
 - o 즉 양자간 FTA 체결국간의 '특혜'의 차별적인 효력이 상당 부분 감소해 왔다는 것을 의미함.
 - o 글로벌 생산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원산지규정, 표준, 통관 절차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o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물류 비용 하락, 제조업의 소프트화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.
- (연준의 기준금리 인상)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시기보다는 인상 폭과 속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.
 - 엘런 의장은 12월 3일 의회 합동 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인상 지연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12월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
 - o 엘런 의장은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20만명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도 실

업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1~2년 동안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.

- 주요 IB들은 12월 금리인상폭을 약 0.5%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으나 0.15%포인트 정도로 매우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.
 - o 엘런 의장도 갑작스러운 긴급정책은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강조
 - o 2000년대 중반과 같이 17회 연속으로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- (유가하락에 대비할 필요)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저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이란이 지난 7월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원유 수출량을 늘리고 있고 OPEC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원유 생산량 감산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o 베네수엘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5% 정도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은 러시아와 같은 OPEC 비회원국들이 감산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.
 - o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
 -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, 브라질 등 산유국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유국들이 오일머니 회수에 나서면서 신흥국들의 자금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

□ (정책적 시사점) TPP 등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시장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

- 향후 FTA 참여의 결정변수로 무역효과와 체결가능성 외에도 참여국간 네트워크 효과, 즉 생산분업 효과라는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.
- TPP 참여국들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만, 우리나라와 같이 TPP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.
- TPP와 같은 시장 확대 정책과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
-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-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,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.